

전쟁 소문에 휘둘리지 말자

박용욱

(前 국방부차관)

1. 요지경의 한국사회

요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요지경 속과 같은 기묘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통하기도 하고 거짓이 사실로 둔갑하기도 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을 권위 있게 판단해 주는 법적,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나 국가기관이 과연 존재하는지조차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북핵 위기가 심각한 상태로 고조되어가도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방호와 국방대책 강구보다는 무상복지 대책을 우선시하고, 병영 문화개선이라는 명분하에 전시에 대비한 전투력 강화보다는 병력감축, 복무기간 단축 등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이와 함께 자주적 군사역량을 강화한다는 미명 하에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한다는 등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약화를 서두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안보를 우리 자신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

이 우려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상황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도 이런 요지경 속 같은 우리 사회의 방향 감각을 잃은 혼란스러운 현상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국가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나라라면, 앞으로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까?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유엔안보리는 그간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때마다 대북 제재 합의를 발표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의 6차에 걸친 핵실험이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였다. 이는 유엔안보리의 무능과 무기력의 소치라 아니 할 수 없다.

미국도 그간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대미 협력 자세에 실망해 왔고 지금은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일명 “한국 체치기”라는 말이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도 않게 되어 버렸다. 더구나 양국의 국가이익이 항상 일치한다는 보장도 없다.

한편, 일본과의 관계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유사시, 과연 한일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가 의심된다. 사정이 이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구원의 손길을 간청해 볼 수 있을까? 이는 과거 역사에 비추어서도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북한 김정은에게라도 매달려 볼까? 지금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들은 북한의 핵 개발은 우리에게 위협하지 않으며, 통일되면 오히려 북한 핵은 우리의 핵이 될 수 있으니 구태여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해괴한 망상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른바 ‘민족’이라는 명분 아래 민족자주 통일을 내세우며 한미동맹,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등 우리 안보의 기본 틀을 무너트리려는 소위 중북들의 머릿속에 숨겨 있는 허황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요지경 속의 우리사회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Donald J. Trump)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불가론, 군사옵션 검토 등의 강경노선과 북한 김정은의 6차 핵실험과 뒤이어 계속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도발적 언동이 맞물려 마치 한반도에 당장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형국이 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는 지금 “전쟁만은 절대 안된다”는 전쟁 기피증이 만연되어 있고 북한의 핵 공갈협박을 눈앞에 두고도 평화만을 읊조리고 있다.

우리는 전쟁 소문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전쟁을 선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쟁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는 전쟁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조건 항복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피하는 자를 좇아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냉철

한 판단이 필요하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상책이다.

2. 군사옵션에 대한 소견: 선제공격, 전술핵 재반입, 한국의 핵무장

북핵위기의 극복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시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CVID가 아닌 현 수준에서의 동결 (freezing)은 핵 문제의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핵의 완전폐기, 즉 CVID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는 모든 평화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평화적 외교적 협상, 특히 중국이 선호하는 6자 회담은 오히려 북한 정권에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주었을 뿐이라는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한 대다수 유엔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견해며,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여러 가지 군사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옵션에는 육해공합동훈련, 한미연합훈련 등 무력시위라든가, 핵항모, 전략폭격기, 전술핵 등 전략자산의 전개라든가,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예방공격(preventive strike) 등 특정 군사력의 활용강도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세간의 논란이 되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문제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다. 그리고 ‘한국

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도 있다. 앞의 두 방안은 미국 측의 전략적 결정 여하에 달려 있으며, 미국의 사활적 이익 (vital interest)이 직접 위협 받게 되는 상황 여하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문제의 성격상, 우리나라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미국의 동의 여하는 그 다음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가. 선제공격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전제조건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즉, 미국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위협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책이 될 것이며, 그 방책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CVID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적 수단으로는 CVID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수반하는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일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군사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약속했다”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다”고도 했다. 이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단순하

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현실 인식인 것 같다.

우선 미국이 자신의 사활적인 국가이익이 위협 받는다고 판단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정할 때, 한국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말고도 다른 지역에 전개된 전력만으로도, 또 한국 영토를 건드리지 않고서도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설령 북한이 미국에는 대항하지 못하고 대신 한국을 공격하여 제2의 한반도전쟁이 불가피해 진다고 할 때, 우리는 전쟁을 촉발한 미국을 비난하면서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깨겠다고 할 것인가. 최근 보도에 의하면, 현(現)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이런 투의 강구연을 했다고 한다.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안보의식 이라면, 이를 단순히 철없는 어린아이의 응석으로 치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웃어넘길 수만도 없을 것 같다.

북핵위협 제거를 위한 미국의 선제공격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이지 다른 나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만일 북한이 미국 대신 한국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즉각 반격을 가하기 위한 만반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핵우산이나 확장핵억제전략(extended nuclear deterrence)의 실효적 적용도 그 조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재래식 전투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금은 국민 모두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강화와 아울러 한국군의 독자적 전투역량 강화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때인 것이다.

나. 전술핵 재반입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 치권은 여전히 찬반 양극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국 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도 혼란스럽기 는 마찬가지다. 국방장관의 견해와 청와대 안보 라 인의 견해가 다른 것 같고, 국방부도 처음과 나중 이 다른 오락가락 현상을 보여 우리를 더욱 불편하 게 하고 있다.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가 능할 수가 없다.

물론 우리정부가 일관되게 전술핵 재반입을 미 국에 요청한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다. 아마도 거부할 가능성이 훨씬 클지도 모른다. 문제는 전술핵이 실제로 재반입이 되느냐 의 여부 보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 부의 대응의지가 얼마나 결연한지를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이다.

현재 북핵 위기사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와 정 치권의 모습을 보노라면 정말로 민망스럽기 짝이 없다. 견해와 입장이 서로 엇갈릴 수는 있다 하더 라도, 전술핵 재반입을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권의 논리가 너무나 허술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 문이다. 마치 홀로 허공을 향해 독백하는 소리 같 이 들린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당국은 전술핵 재반입은 우리나라의 비핵/비확산(no-nuclear/non-proliferation)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 리가 북한에 핵제거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며, 또 역내 핵 확산을 자극하게 된다는 논리 다. 현실은 이런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다.

대화와 협상에 의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 은 전무 하다는 것이 지난 20여 년 간의 대북 협상

경험을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북한은 지금 태평양에서 수소탄 실험까지 운운 하고 있는 형국 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비핵정책이 북한의 핵개 발에 아무런 제동 수단이 되지 못했다는 것도 이 미 지난 20여 년 간의 경험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전술핵 재반 입 반대논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손잡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겠다는 논리와 다름없다. 이는 평화 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깰 수도 있다는 말과도 일 맥상통하는 것 같다. 이렇고도 한미동맹이 견고히 유지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허황된 논리를 버 려야 한다.

다. 독자적 핵무장

오늘의 북핵위협을 극복하는 또 다른 옵션에는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 이라는 방안이 있다. 1970년 대 초, 미국의 주한미군철수계획과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독자적인 핵무장 의도를 내비 친 바 있었다. 그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는 한국을 잠재적 핵개발국으로 인식하고 감시를 강화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km 이하로 제한 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상황이 미국 본토까지 를 위협할 징후를 보이게 되자, 미국은 한국의 탄 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연장에 합의했고, 지 금은 그 이상 연장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공 화당 후보자로서 유세 당시, 북핵위협에 대해 한국 의 독자적 핵개발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 령하기도 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스스로 핵무장 여부를 결정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핵비확산조약(NPT) 가입국이고, 핵개발 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북한처럼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핵무장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결코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특히,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제거가 아니라 현 수준에서의 동결 정도에 합의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가 주저 없이 핵개발을 추진해야 할 상황일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의 정치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3. 최선의 전쟁방지책은 한미동맹 강화

이 세상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오로지 한국뿐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유지 목적이라는 견해는 우리의 할 말을 잃게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속성을 잘 아는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언젠가는 그들 자신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힘이 지배하는 국제관계의 본질적 속성과 북한체제의 기만적 속성을 직시해야 한다. 결코 현시점에서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와 같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또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위협을 평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망상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지난 70여 년 남북분단과 남북대화의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

는 사실들이다.

우리나라는 독자적 전투역량과 대북억제역량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국방투자를 대폭 증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그 다음의 문제다. 우선순위를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북한 핵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도 안 된다.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며 연일 반미시위에 열을 올리는 사회 일각에서의 일탈행위를 정부는 좌시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의 안위에 대한 나라 안팎에서의 위협 행위를 단호히 척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 | 박용욱

경기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서울문리대수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1975년 미국 하와이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 취득. 1998년 육군중장 예편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국방부 차관, 이북5도청 평안남도지사 등 역임. ‘한반도비핵화 남북공동선언’ 협상대표,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장,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대표 등 주요 직무 수행.